

지부 부서장 역량강화 교육 2007년 임단협 승리의 밑바탕으로



노동조합은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고 지부 조합간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력을 향상하고자 2007년 4월 9일 ~ 25일 까지 각 지방본

부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직의 허리역할을 하는 부서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준비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시하는 교육인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에 열중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강북지방본부 김태호위원장은 지부장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부 부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구지방본부 김근주위원장은 올해 지부 부서장까지 교육을 확대하는거보니까 올해는 뭔가 큰일을 맡겨야겠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열심히 교육받고 각자의 지부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류춘용 조직처장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조직력을 극대화하여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지부 부서장교육은 총8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첫번째 조합간부의 역할과 자세 시간에는 백관기 쟁의국장이 2007년 어려운 노동정세, 한미FTA 문제점, 조합간부로서의 행동지침 등을 강의하였고 특히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지부 부서회의를 정례화 하고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여 정보 습득후 일반 조합원에게 전파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두번째 선전,선동 시간에는 강인석 교육국장이 선전,선동의 기술 및 연설에 대하여 집중 강의 했고 투쟁의 현장에서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번째 후생복지 분야는 한호섭 복지국장이 전반적인 복지현황과 우리사주, 임금구조, 단위노사협의회 진행요령, 명예산업안전관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현재 회사측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임금 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유포하

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회사측의 논리에 절대 넘어가지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들에게도 주지시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네번째 단협해설 시간에는 김화식 산업안전국장이 단협협약의 의미와 주요 내용, 산재유형과 보상내역, 사회4대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작은 산재사고라도 은폐되지 않고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앞장서줄 것과 사고 발생시 산재 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조합에 문의하여 조합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폐회식에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지부의 의사소통이 되지않고 불신만 쌓여가는 현실에 맞서 지부 부서장들이 이를 타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비정규법 시행령 입법 예고 파견허용 업무 대폭 확대... “비정규 양산법” 본질 드러나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견허용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87개 업무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0일 입법예고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에 마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달 첫째주 경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

례’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 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대상 전문 자격 ① 감정평가사, ② 건축사, ③ 공인노무사, ④ 공인회계사, ⑤ 관세사, ⑥ 변리사, ⑦ 변호사, ⑧ 보험계리사, ⑨ 손해사정사, ⑩ 수의사, ⑪ 세무사, ⑫ 약사, ⑬ 의사, ⑭ 치과의사, ⑮ 한약사, ⑯ 한의사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그 밖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예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게 된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인별로 부과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

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 정해진 과태료액을 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규칙>
파견법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허용업무를 조정할 것으로, 종전의 26개 허용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유사한 업무를 묶어 소분류 단위로 조정하면서 파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시장의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결과 총29개가 되었다. 이를 세세분류(5자리)로 보면 종전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난게 된다.

한편, 당초 파견법 시행령(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제외되었다.

이는 파견의 판단기준을 법규명령화 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입법기술상

의 문제(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가 있어 이번 개정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검찰기준과의 불일치 및 적용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법무부·검찰이 참여하는 TTF를 구성, 양 기관간 통일적인 파견·도급 구별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4.19자로 전국 검찰청 및 지방노동관서에 동시에 시달되었다.

한편, 노동부는 7월부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차별시정안내서를 5월중 발간, 배포하고, 그 즉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지방관서 대상 권역별 워크숍, 사업장 교육 등을 집중 실시, 제도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 117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및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1. 일 시 : 2007.05.01 (화), 13:00 ~
2. 장 소 : 서울 대학로
3. 참석대상 : 충남, 충북, 강원 지방본부 지부(분회)장 이상

■ 5.1절 남북노동자 통일 대회

1. 일 시 : 2007.05.01 (화), 15:00 ~
2. 장 소 : 경남 창원(창원종합운동장)
3. 참석대상 : 부산, 전남 지방본부 조합본부 및 조합원

인사말

부서장의 활동이 바로 노동조합
오즘 조합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KT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노동조합들이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가 중앙과 현장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이석행 위원장이 6개월간의 현장 대장정을 선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현장과 중앙이 일치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일선에서 조합원들과 생활하고 있는 부서장 여러분들을 만나 조합활동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조직은 중앙과 지방본부 그리고 지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도 인간의 신체조직과 같아서 지부가 노동조합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부서장 여러분이 바로 노동조합이며 위원장입니다.

부서장 여러분!
사측은 수년전부터 통신회사가 위기라면서 조합원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통신회사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그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성장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위기입니까? 한국의 수만개 기업중 1년에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회사는 열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소수입니다. 경영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꾸며진 위기입니다. 정작 진짜 위기는 실체가 없는 것을 마치 실체인양 믿는 것이며 조합간부들이 스스로 움추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측의 논리를 인정하고 이해해 버린다면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부서장 정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올해 조합원의 실질임금 쟁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측은 올해도 대내외적인 환경 운운하면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벽을 깨부수 수 있는 힘은 바로 현장 조합원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2007년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지만 단결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가 바로 노동조합, 내가 바로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조합원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2007년은 반드시 승리하는 임단협이 되도록 합시다. 책임지는 자세, 실천하는 조합간부는 바로 부서장 여러분의 활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07년 마음 굳게 먹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리고 전진합시다.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춘계 체육행사 실시
• 행사기간 : 2007.04.23(월) ~ 05.04(금) [단, 토·일요일 제외]
• 대상 : 재직직원 (청경, 계약직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2만원
• 행사내용(각 지부 실정에 맞게 시행)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미국측 일정에 쫓겨 퍼주기식 졸속 협상

<p>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 명태 15년, 민어 12년의 장기철폐 기간 확보 물품취급수수료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수출품에 의무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2000달러 이상 물품에 가격의 0.21%) 철폐에 합의. 이번 조치로 연간 4700만달러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가능 한국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수출세 부과금지 및 상품위원회 설치 	<p>준 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기준 원칙으로 원산지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산 원사의 사용자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 기준(yarn - forward)을 도입함으로써 '사→직물' → '섬유 원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다만 린넨·여성재킷·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레이온·리오셀·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는 예외 확보 또 일정물량에 대해 원료공급이 부족해 수출품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2억SME(우리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원산지 예외쿼터(TPL) 부여에 합의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대미수출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세이프가드보다 완화된 발동조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p>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 적용범위에 지방정부 포함 국제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은 WTO/기술장벽(TBT) 협정에 의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WTO/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를 두기로 합의 시험·인증기관 지정의 내국인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하는 내국인대우 원칙에 합의 TBT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필요시 특정분야의 워킹그룹 구성 	<p>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현재유보)통신·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선택의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 진보에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기로 합의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의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하기로 함. 기타 소비자보호 등 협력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소비자보호기관이 협력 저작권 70년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을 협정문 발표 후 2년간 유예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미국의 관세 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금액기준)를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 대형 승용차도 3년후 철폐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사시), 부품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5년내 철폐: 타이어 10년내 철폐: 트럭(픽업 포함) 자동차부품은 양국이 즉시철폐 한국의 관세 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우리 민감부품(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자동차 원산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한국이 선호하는 공제법·직접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소세 : 3단계를 2단계(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표시 10%~8%, 3년후 5%로 인하)로 개편 자동차세 : 5단계를 3단계(1000cc 이하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 이상 200원)로 개편 안전기준(건교부가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42개 안전기준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 적용 창의기준(간화면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 장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우리 환경부가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존 적용의 유연성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OBD)는 2008년 말까지 장착 의무 면제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해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소요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 수준) 패비에서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 가능 자동차 표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표준 작업반을 설치해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표준 정보 제공, 업계의 의견?에로서향 반영 	<p>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세이프가드보다 완화된 발동조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수입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착순·수입권 공매·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의 경우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기 오렌지(50%), 닭자·전자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세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면을 분리해 국내산과 대외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과일에 대해 보호장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해 우리 수확기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오렌지)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포도)/사과·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유지) 관세 장기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고기·감귤·고추·마늘·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 등 	<p>원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 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 일정 기준(한반도 비확화 진전 등)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산(미국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이준을 도입 대체사용 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물·석탄·고철 등과 같이 대체사용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면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립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p>의약품/의료기기</p> <p>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간 규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등에 관한 우수제 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을하기로 합의 특허약과 복제약간 비차별 원칙, 특허약의 가치 인정 독립적인의심권 절차 마련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p>금융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자본거래허가제 등) 발동 가능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농협·수협)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을 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수출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예금보험공사·기보·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 보복 금지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국경간거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수출입 적화보험)와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를 개방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조성된 펀드의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함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 2년 유예 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해 유예기간(한·미 FTA 발표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우체국보험 특수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체국보험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금규정을 통한 건전성 감독 강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동안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지급여력기준 적용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 	<p>통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화물 신속관세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선 사전신고제도 도입 특수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급택승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 허용 원산지자유증명제 및 사전판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쿼터세율 등의 문서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 도입 원산지 현지조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해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함 과세자료 비밀유지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입업체가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 	<p>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 피소를 우려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중재판정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 수행,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의 공개, 국제중재 시 NGO 등 제3자 의견 제출권 보장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재절차의 공식 언어로 규정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위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직업반'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키로 합의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표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기로 최종 합의 법률·회계·세무(외국법 자문 분야) 단계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세무 분야는 2단계)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포괄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국민연금·보건·택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 금융수 등 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방송서비스 부분 개방
<p>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 즉시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즉시철폐비율(미국: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한국: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 	<p>위생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SPS 협정상 권리와 의무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SPS조치(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관련 분쟁 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기로 합의 SPS 정예 위원회 설치 및 기술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가간 기술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명문조항 포함 <p>무역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상계조치 조사전 사전통지 	<p>경쟁·충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 관련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은 한국에 대해서만 재벌을 사전적으로 규정해 경쟁법 적용을 요구하였던 재벌관련 각주를 삭제하는데 합의 동의명령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국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검토토하여 소관부처간 도입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동의명령제의 도입에 합의 입법예고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 비위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대상에 WTO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비위반 조치 허용. 비위반 제조 허용 대상은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에 한정 	<p>정부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은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폭 확대 미국 본토내 실적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 제거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미 FTA 통신분야 KT, SKT 제외한 주요 통신업체 외국인 100% 간접투자 허용

1. 기존쟁점

-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 직접투자 총액제한 49%를 51%이상 확대 또는 완전 개방요구
- ▶ 기술표준 정책 관련
 - 현행 정부주도 기술표준 설정 및 선택 과정을 개별 사업자 자율판단에 따른 선택 요구
 - 미국에서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정부 개입 금지 요구
- ▶ 지배적 사업자 의무사항 및 조항 적용범위 관련
 - 미국 무선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범주에서 제외 시킬것을 요구
 - 설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망 공동활용 및 상호 접속 보장 요구
- ▶ 해저 케이블 육양 관련
 - 미국 케이블사업자의 국내 육양설비 접속 허용 요구
 - 국내사업자와 비차별적 대우 의무화 요구
-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요구
 - 일시적 복제 불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 글, 사진,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무단전송 중단 요구

- ▶ 주파수 할당 관련
 - 주파수 등 희소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 적으로 시행
- ▶ IPTV 등 통방융합 관련
 - 국내 제도 미비에따라 IPTV는 포괄적으로 미래 유보(서비스정의, 외국인투자자도 내용관성에 대한 규제, 상업적 주제 의무 등에 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보)

3. 분석

-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 KT와 SKT를 제외한 하나로텔레콤 및 LG텔레콤, 데이콤, KTF 등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함에 따라 한국의 통신시장과 정책에 미국의 투기자본의 개입 가능성이 커짐
 -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그동안의 통신 인프라 확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각종 통신정책이 효과 있게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됨
 - 특히 통신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각종 혜택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각종 보편 서비스 제도가 외국인 소유의 통신사업자에게 차별적 정책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되어, 통신정책의 혼란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 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투자의 경우 공공성 심사 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익성 심사제도사 시행된 이래 한반도 심사제도가 진행되지 않은 그동안에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공익성 심사제도가 적절한 안전장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공익성 심사제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할 경우 이 또한 투자자-국가간분쟁소송(ISD)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제도도 규제하지 못할 소지가 크다.
- ▶ 기술표준 정책 관련
 -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기술표준 정책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공공 목적 달성의 성격과 범규정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또한 정부 권한과 미국 사업자의 의견 개진 수위 및 상충 정도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 대상이 될수있다.
- ▶ 주파수 할당 경제제 도입 의혹
 - 주파수 할당 경제제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주파수 심사 할당제를 국제 경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바에 비추어 보면,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는 주파수 경제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일부에서는 이미 주파수가 방송과 통신 등에 모두 할당되어 새로 할당할 주파수 대역이 없기때문에 이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통신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현재 가치가 적은 주파수 대역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아나로그 방송대역의 경우 경제제 대상이 될수있다.
- 경제제의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로인한 통신업체의 부담, 그리고 통신업체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통신시장이 황폐화되었던 경험을 유럽과 미국등은 경험한 바 있다.
- ▶ 공중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
 -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 등을 통신사업자가 상호 접속망 등을 통해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설비에 투자하지 않은 미국 자본이 KT, 하나로, 파워콤 등 한국의 주요망과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기간통신 산업체가 네트워크 등 시설투자에 의욕을 감퇴시켜 한국 통신 인프라의 전체적 위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더우기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를 양쪽 무선분야 지배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에서 배제 되면서 유독 한국의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 접속 의무를 적용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밀린 협상이고 한국 통신업체에게만 불리한 조항이라 할수있다.
- ▶ IPTV 등 통방융합 관련
 - IPTV 관련 법안이 미래 유보안으로 규정되고 국내에서 마련되지 못하였기에 국내 영향력에 대하여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움
 - IPTV가 통신으로 규정될 경우 방송업체에 대한 미국자본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100% 진출이 가능하게 될. 이경우 공익성심사제도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음

4. 중합

통신분야의 경우 정부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차단을 하고 또한 미국통신 시장의 안정적인 진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된 것이 많다. 이는 이후 해석 여하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상대국제도 대상에 대부분 해당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되는 결과도 낼 수 있기에 향후 협정 문구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3항쟁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4·3항쟁 정신 받들어 한미 FTA 반드시 저지하자



3월31일 KT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4·3항쟁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관으로 열린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59년 전 4·3항쟁 열사들이 분연히 일어서 투쟁했듯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한미FTA 저지와 제주군사기지 반대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 힘차게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청산되지 못한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한미FTA는 59년 전 미군정이 가만만 바뀐 것으로 노무현 정권은 59년 전 이승만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침탈 정책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명분도 체면도 모두 내딛진 채 미국의 오만한 시한 연장 요구에 그대로 끌려가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며 협상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뒤 한미FTA 저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주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허세욱 열사 끝내 사망 그의 뜻 받들어 한미 FTA 저지하자



허세욱 열사는 1953년 5월 9일, 경기 안성에서 9남매 중 다섯째로 출생했다. 중학교를 다니던 그는 서울로 상경했고 이후 막걸리, 꽃, 박카스 등 온갖 배달일을 했다. 그가 한독운수에 입사해 택시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것은 1991년이다. 그의 나이 마흔이 되던 1994년, 봉천동 철거투쟁에서 '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당시에 봉천 6동에서 철거민으로 지내면서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하던 빈민운동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후 허세욱 열사는 1995년 관악민주연대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고, 1998년에는 참여연대,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에 입당할 만큼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앞장서지 않는다. 누구의 위에도 서지 않겠다"며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2년 한독택시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당시에도 그는 이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후 민주택시연맹 한독분회 대의원과 함께 통일부장을 겸하기도 했다. 2002년 6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허세욱 열사는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미군에게 무죄가 발생한 뒤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범국민 촛불행사에 참여해 투쟁을 호소하고 함께하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그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지 "미군이 세운 추모비 대신 내 퇴직금으로 꼭 두 여중생의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며 임버릇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후 허세욱 열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 가입해 주한미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그에게 평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지점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손님들에게 나눠주겠다'며 1천장을 가져간 지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 "유인물을 또 찾아갈 수 없느냐"며 사이드 1병을 내밀었던 소박하고 성실한 활동가였다. 허세욱 열사는 근무 중에 차를 세워두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노동분회 활동을 펼칠만큼 열성적이었으며, 2006년 5월 4일에는 대추리에 작전을 감행한 한국군에 저항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쫓아가 마다가 현장에서 연행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07년 4월 1일 오후 3시 55분경, 협상시한을 넘겨 진행 중이던 한미FTA 협상당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7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온몸에 휘발성 물체를 끼고 분신한 허세욱 열사는 불길 속에서도 한미FTA 반대의 구호를 외쳤으며, 온몸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화석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지만, 기자들을 향해 연신 구호를 외침으로써 마침내 세상에 노동자 허세욱의 진심을 알렸다. 하지만, 그 댓가는 전신 3도 화상과 기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이었으며, 보름만인 4월 15일 유명을 달리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내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과 정통부 간담회 실시 주요 현안문제 해결위해 IT연맹과 정통부간 대화 채널 개설

주요 현안 문제 해결 일환으로 노정 대화 활성화에 나선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IT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4월 6일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노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IT연맹 박홍식 위원장의 설명에 정통부 노준형 장관은 정책홍보관리분부를 선정, 이를 통해 지속적이며 책임 있는 대화를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간담회에서는 △IT산업 비정규노동자의 어려운 조건과 실태 △디지털방송위원회에서 합의한 각종 정책 수행 여부 등을 제기하여, 정통부의 관심 및 노력과 아울러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등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노준형 장관은 대화 상대로서 IT연맹의 위상을 확인하며,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정책홍보관리분부와와의 실무 간담회가 이어졌다.



정책홍보관리분부장 및 해당 관계자(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장, 미래정보전략본부 기획총괄팀장,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혁신기획관리실)들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노사결정에 대한 정통부 부당 개입과 △TTA 민준기 위원장 관련 중노위 원칙복직 결정에 대한 사

측의 불복 문제 등을 제기하자, 정통부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또한, 통신규제로드맵 전담팀장과 '역무분류', '결합판매' 및 '보편적 서비스'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특히 연맹위원장은 역무분류와 관련, 정부의 무리한 기간통신역무재편에 따른 TRS 사업과 관련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번 정보통신부와의 간담회는 노정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구체적 실무협의 및 관련 통신 정책 협의 채널 확보와 함께 TTA 및 NIA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실무 간담회는 연맹 조형일 정책실장, KT노조 최광수 정책실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및 유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이 함께 했다.

제 2차 UNI 세계 통신대회

노동조합 조직화로 노동자의 권리보장 발자



제2차 UNI 세계통신대회가 전 세계 통신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4월 20일부터 21일 까지 이틀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다.

이번 통신 대회는 유니 통신 세계 의장인 래리 코헨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세계 각국의 통신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개최국인 그리스는 용이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해 그리스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를 촉진 시켰으며 IT의 발전이 없이는 Globalization

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 하였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경제 발전할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덴마크는 사모펀드가 결국은 연금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브라질은 좀 더 많은 젊은 노동자의 유입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내용을, 카메룬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발표 하였다.

이외에도 멕시코, 프랑스, 일본 등이 자국의 통

신 상황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UNI 통신 세계 의장 선거에서는 일본 NTT 위원장 쇼지 모리시마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 되었다.

이어 노동조합이 조직화 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받기 힘들다는 노동조합 조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폐회 하였고 곧이어 이어진 UNI 아프리카 회의에서는 2007~2008년의 통신 분과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아시아 피시픽 지역의 아웃 소싱 정보 수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신분과 네트워크 형성, 비정규직을 포함한 통신회사 조직력 강화, 노동조합이 아직 설립 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조합 설립 등이다. 이중 한국과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 노동조합에게는 노동법 개정이 있을 때 반드시 NUI 아프로 쪽에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차기 유니 아프로 통신 의장 선거에서는 차기 의장으로는 말레이시아 통신노조(NUTE) 위원장 모하마드 사피가 당선 되었다

이로써 2007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제2회 세계 UNI통신 대회와 제9회 UNI 아프로 회의를 마쳤다.

한민족 I.T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였다

서윤수 (충남지방본부 조직국장)

4월21일 10시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약 2시간 비행 후 도착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공항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가자 KT 현지법인 NTC 관계자와 고려인동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미니 버스와 지프차에 짐을 싣고 봉사활동 예정지 파르피잔스크(수찬)을 향했다.

3시간 반 동안의 긴 시간을 이동하며 눈에 들어오는 그곳의 풍경은 아직도 높은 산에 녹지 않은 눈과 벌거벗은 나무와 황량한 벌판뿐이었다. 피곤함에 지쳐 졸다 자다 처음 접한 이국 풍경을 바라보며 도착한 숙소는 무슨 창고 같은 건물이었다. 여정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파르피잔스크역 옆에 있는 식당에서 현지 고려인협회에서 준비한 현지식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에서 일찍 취침에 들어갔다.

22일 아침 우리나라와 2시간의 시차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고려인 동포들이 지어준 아침을 먹고 7시 고려인 문화센터로 향했다. 말이 문화센터이지 지은 지 100년이 넘는 옛 소련시절 중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을 한국단체가 후원해 구입한 건평 400평의 건물로 내, 외부 모두가 보잘 것 없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컴퓨터를 설치할 방의 청소와 페인트칠 바닥정리 등이었다. 빼대만 남아있는 것같은 건물이 책상과 PC까지 설치하니 제법 사무실 같았다. 모든 정리 정돈을 한 후 현지 고려인에게 풍물놀이 한복, PC, 음향기기, 우리 영화DVD 등도 함께 전달했다. 고려인협회장은 한민족 IT봉사 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감사장을 주었다.

24일에는 우리 KT가 출정한 NTC 러시아 현지법인을 방문해 현황을 설명 듣고 직원들의 일 하는 모습, 설비들을 견학했다. 러시아 진출 10년 만에 매출 1억 불이라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며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됐다.

25일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다시 한번 생각했다. 고려인 동포에게 구 소련시절 민족말살 정책으로 강제이주 70년을 극복하고 한민족 상호협력 및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약 5,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모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파르피잔스크(수찬) 지역의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직접 보고 듣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생활력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민주노총 제 40차 대의원 대회

차기 임원선거부터 직선제로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KBS 88체육관에서 제4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직선제 규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으로 남은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개최 직후 허세욱 열사 투쟁과 관련한 보고만을 진행한 뒤, 곧바로 임원 직선제와 파견대의원 직선제를 동시에 표결에 부쳤다. 임원직선제의 경우 투표자 579명 가운데 407명이 찬성해 70.2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그러나 파견대의원 직선제는 321명이 찬성하고 258명이 반대해 55.4%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규약개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 2/3 이상

의 찬성(386명)을 얻어야 한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파견대의원 직선제와 관련해 '직선제 실시여부는 가맹조직의 권한'이라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들이 상당수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부는 임원 직선제와 파견 대의원 직선제를 2개의 안건으로 분리하고, 일단 직선제 실시를 확정된 뒤 세부내용을 채워나간다면 된다는 방침이었다.

직선제 안건을 처리한 뒤 민주노총은, 아직 공식으로 남아있는 2명의 부위원장에 박정곤 후보 전 기아자동차노조 부위원장과 전병덕 전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을 선출했다. 박정곤 후보와 전

병덕 후보는 투표자 542명 중 각각 422표와 419표로, 나란히 77%대의 득표율을 보이며 무난히 당선됐다. 임원 선출을 마치고 의무금 인상과 관련된 3호안건 재정혁신 방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성원대탈모 유희했다.

한편 이석형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산별임단 두 준비가 목전의 과제이고, 정부가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이 확실시 되어 즉각적인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투쟁전열을 재구축해야 할 때"라며 "또한 한미FTA타격을 무효화시키고, 협정체결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작은 힘이지만 실질적 후원이 절실

이광욱 (전북지방본부 사무국장)

2시간 비행 후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렵게 출입국심사를 마친 후 주차장에 가보니 고려인운동본부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동기본부 김재영 본부장과 NTC직원들이 마중나와 반겨주었다.

19시 수찬 지역에 도착하여 고려인협회 회장님과 일행들은 서툰 한국어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간단한 인사말로 반겨주었다. 동포들 중 가장 큰 문제는 국적상실과 불법체류로 임시거주자나 불법체류자는 무국적자 신분으로 아무런 의료혜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고려인은 구소련으로부터 약간의 연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낙후된 생활 자체가 비참하다고 했다. 이 지역(수찬)에는 5,000여 명 정도의 고려인이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들뿐이었다.

다음날 조식 후, 봉사활동을 위해 수찬 고려인문화센터로 이동했다. 도착해보니 구소련에서는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다는 아주 오래된 3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말이 문화센터이지 1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한다. 벽, 마루, 문, 바닥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창문은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로 겹겹이 막고 모두 뜯어내어 새로이 재생해야 했다. 작업복과 얼굴에 모두 페인트가 묻었지만 하나하나 우리 봉사단의 발과 손으로 깨끗해지는 건물을 보니 만족감이 들었다.

우리가 준비한 책상이나 PC를 설치하기에는 마루바닥의 상태가 좋지 못해 마루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전기배선 작업과 PC설치 및 업그레이드, 인터넷설치, 사무기구를 설치했다. 끝으로 문화센터에서 필요한 자재와 물건 등을 전달(기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KT가 수찬 지역에 기업으로는 처음 방문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짧은 봉사활동을 마쳤지만 괜히 생색만 내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과, 비록 적은 힘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힘을 합쳐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실질적인 후원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고 되새기며 우리는 숙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향했다.

KT 산업안전 보건 대회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역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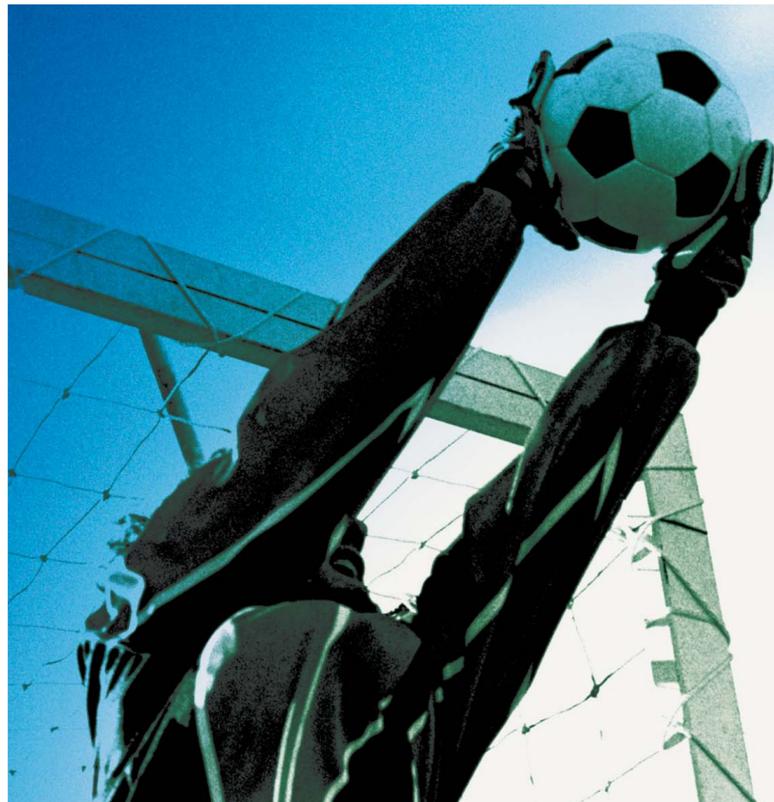
KT 산업안전대회가 노사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수련관에서 4월5일부터 양일간 실시된다.

김화식 산업안전국장은 축사를통해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사고로 인한 1차적 재해

가 많았다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축소되고 이에 반비례해 노동강도가 심화된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 하며 특히 현장

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안전대회는 무재해 달성사업장 표창과 2006년도 성과분석 및 2007년도 계획등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교육을 끝으로 폐회했다.



제4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개최

전국 조합간부의 단결력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올해 입·단협 투쟁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2007년도 제4회 위원장기 축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 간 2007.05.03(목) ~ 05.04(금), 2일간

장 소 경주 보문단지 시민축구장

참석대상

- 전국 조합간부(지부장, 분회장, 지방상집, 비전임, 중앙본부)

- 질서유지 요원 및 심판진

행사종목 축구, 릴레이 500M 계주, 줄다리기

집결일시 2007.05.03(목) 15:00, 경주수련관